

# 민주 “쌍특검 관철, 이재명 구속영장은 물타기”

### 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李 “선택적 법치” 끝낼 수단 특검 정성호 접견 유출... 공수처에 고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은 15일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관철을 주장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데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의 고의적인 자료 유출이라고 보고, 검찰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쌍특검’ (대장

동·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 하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며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 법치를 끝낼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겨냥해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 소도(蘇塗)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서민과 정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의 칼날이 특권층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선 “특검을 통해 소모적 논쟁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 해결은 특검에 맡기고, 모든 역량을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 상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과 김 여사 부실 수사로 국민 지탄이 커지자 다급해진 모양”이라며 “급기야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얘기를 흘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영장 청구 운운은 50억 클럽과 김 여사 의혹 바자기 수사로 여론이 들끓자 대놓고 물타기하겠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검찰을 쏘아붙였다.

검찰은 금명간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쌍특검 관철을 위한 야권 연대 합류를

정의당에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특검을 꼭 관철할 것”이라며 “정의당도 검찰 수사를 더 기대 말고 특검에 조속 동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고위원들도 특검과 이 대표 상대 수사 부당성에 가세했다.

정정래 최고위원은 “김 여사는 대통령 영부인직을 내려놓고 제대로 특검 받으라”고 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김 여사 주가조작 가담이 가짜뉴스고 이용당한 것이라면 왜 수사에 임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는지 새 영장 청구 시나리오를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갈라치기와 억지 요건 만들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성호 의원이 면회하면서 사담 위로를 건넨 걸 회유 시도라고 한다”며 “이 대표 혐의 소명이 어렵자 증인을 회유했다고 떠들게 해 증거인멸 우려를 덮어 씌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정성호 의원의 정진상 전 대표실 정부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접견 보도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대화 내용이 모두 기록되는데 회유나 증거 인멸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며 “결국 먼지털이 수사에도 이 대표를 옹호할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자백”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 野 강행 처리

### 與 “동의할 수 없어... 안건조정”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처리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안은 노조법 2조에서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자도 사용자 범위에 넣었다.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서 ‘노동조건 결정’ 부분을 ‘근로조건’으로 변경, 합법적 쟁의 행위 범주를 넓혔다.

또 노조법 3조에서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반영했다.

이에 대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안건조정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낼 것”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 ‘보훈부·재외동포청’ 정부조직법, 행안위 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10개를 병합심사해 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2개 조항만 반영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함께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개정안은 여야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여당 친윤계 중심 ‘尹 명예 당대표’ 추대론 솔솔

### 전대 새 이슈... 당내 온도차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명예 당대표를 맡는 이른바 ‘명예대표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당대표 후보는 15일 윤 대통령의 ‘명예 당대표’ 방안에 대해 “당정은 부부관계 같은 것이고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며 “당헌에도 그같은 취지가 명시돼 있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 공조하고 소통하면서 협력적 관계를 통해 우리 민생을 잘 살피고 보듬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친윤계 핵심인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당과 대통령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까지 당정분리론이라는 게 잘못됐던 것 같다”며 “대통령과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늘 같은 책임을 지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같은 배에 탄 우리 일원”이라며 “명예

당대표 얘길 처음 들긴 하지만,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은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친윤 핵심들이 ‘당정일체론’과 ‘당정 융합’을 띄우며 ‘대통령 명예대표론’으로 공식화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당내 온도차도 감지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난 당원들의 생각 등을 통해 새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모든 것은 중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협력도 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선 강도높은 비판이 나왔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당에서조차 제왕이 되기 위해 총재 정치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표를 뽑겠다며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하더니, 기어이 당대표 위에 서서 직접 당을 틀어쥐어야 직성이 풀리나”라며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허울 좋은 말은 담지도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 尹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금융·통신 고통 분담”

### 비상경제민생 회의 주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 상반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금융비용 등 4대 민생분야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안전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와 금융업계의 고통 분담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장관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 없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과점체제인 은행·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주문하며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서삼석 “인센티브 제공 등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시급”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15일 무안공항의 국제선 부족 등 이용객 불편과 관련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 등 재정 지원을 제공해 국제선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서남권 대표 거점 공항인 무안공항이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많은 정기 노선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20년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무안공항 운항이 재개됨에 따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기노선 마련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은 “무안공항 국제노선이 축소될 경우 멀리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이용객의 불편함이 늘어날 것”이라



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감염병 위기 관리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항공 수요의 분산이 절실하다”며 “국제노선을 고르게 분배해 인천국제공항뿐 아니라 지방공항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항공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안공항의 국제선 이용객 수는 2019년 68만8154명에서 2022년 2만9394명으로 줄었다. 서울=김선욱 기자